

일부 패소 2심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제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재판에서 일부 공정에 대해 근로자파견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후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은 진짜 사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오늘 결과가 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에 중단이 없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1월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내 모든 공정 하청업체 923명(1,2차 소송단) 모두에게 현대제철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공정업무를 정비, 조업, 운송, 크레인 운전 4가지로 나누고 각 업무별로 현대제철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제철 현장에 파견되어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현대제철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고, 2)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제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3)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4) 하청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5) 하청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은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 조업, 롤샷 업체 노동자 566명은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했지만, 중장비운영, 정비, 환경수처리업체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정비, 운송업체의 불법파견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특히 MES(제조실행시스템), 맙시모(Maximo)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PDA, 무전기,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현대제철 관리자들이 하청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도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정해졌다는 증거도 충분합니다.

노조의 증거와 1심 판결에 따르면 현대제철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하청업체의 계약내용과 업무방식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하청업체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은 현대제철도, 하청업체도 알고 있습니다. 운송, 정비 업체만 현대제철의 지휘, 감독에 벗어나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심 재판부가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공정(자동차의 경우 간접부서로 불리는)을 통째로 분리시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파견은 직접, 간접 공정으로 나누어 달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로 종합적인 판단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의 극히 편의적이고 작위적인 판결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현대제철은 모든 하청노동자 정규직화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

2021년부터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모두 현대제철이 당진공장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루한 소송 공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태도 변화는 없습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올해 9월 현대제철 원청에 <2025년 현대제철 당진공장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안>을 제출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안중 첫 번째 항목이 "회사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며, 계속되는 불법파견의 종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입니다.

세부적으로 "1)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전환 2)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포함한 교섭틀을 만들고 성실하게 진행" 입니다. 노사분쟁의 원인을 당사자가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 분쟁은 더욱 깊어지고 길어질 것입니다. 불법파견 회피 꼼수로 자회사를 설립했던 회사의 전략은 결국 실패했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렀습니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온상지로 사회적 낙인만 찍었습니다. 이제 원청 자본의 책임있고 전향적인 결단만 남았습니다.